

도 “올림픽 유치 준비·추경 준비”

주 4일 출근제·공유재산 정비 등 현안 브리핑 “김관영 지사 완주 시·군 방문 행사 잠정 연기”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준비, 주 4일 출근제 시행, 공유재산 정비,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운영 등 이번 주에 추진할 다양한 전북도청의 현안을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 결정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해 유치에 대해 조직과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추경이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4월 국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올림픽 유치, 민생 회복 공약 등 시급한 사안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5월 회계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일정 등에 따라 회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북형 주 4일 출근제 시행... 공무원 68% 신청

전북자치도가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206명 중 202명(68%)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근무 형태는 휴무형과 재택형으로

나뉜다. 천 실장은 “세종시에 있는 지인들도 전북의 주 4일 출근제를 부러워하고 있다”며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단계별 실적 점검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갈 방침이다.

천 실장은 전북자치도의 이처럼 새로운 정책의 테스트 베드는 김관영 도지사의 정책 실행 의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정비 박차... 15만 필지 중 7만 필지 정비 완료

전북자치도는 방치된 공유재산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도내 공유재산 정비 대상은 약 15만 필지이며, 현재까지 7만 1,258필지(약 47.2%)를 정비했다.

하지만 시·군별 정비를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비율이 낮은 하위 20% 시·군을 특별 관리하고, 매주 점검 회의 및 컨설팅을 통해 정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 권역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시범 운영

전북자치도는 3월 4일부터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의 신속한 이송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 치료를 위한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응급 환자 이송 건수는 7만 9,651건이며, 이중 심뇌혈관 환자는 3,300명(약 4%)이다.

천 실장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이송 지연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속한 치료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완주군 시·군 방문 행사 잠정 연기

한편,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시·

군 방문 행사가 잠정 연기됐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완주군 시·군 방문 행사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데 이어 올해도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찬성 추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여러 여건을 고려해 완주군 시·군 방문 행사는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선 국면에 돌입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행위가 금지되므로 완주군 시·군 방문 행사는 최소 두 달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공동 입장문 발표

“윤석열 신속 파면 결정 내려야”

“尹 석방,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 탄핵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 현재, 신속 파면 결정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가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 석방을 결정한 점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점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장문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총지휘자인 윤석열만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다”며, “아직 도 비상계엄은 울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가까워져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그러나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이 가까워 그 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탄핵이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첫 시동’

민주 이원택 의원, 한국육계협회 등과 정책 개선 의견 나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7일, 한국육계협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등과 잇따라 대담을 갖고, 현안과 정책 개선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100여개 단체를 전담해 현장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이하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탐방 첫 일정으로 열린 한국육계협회 간담회에는 한국육계협회의 김상근 회장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 등이 참석해 △신속한 수급조절을 위한 농식품부장관 직권일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 △자문 역할의 축산물수급조정협의회의 축산물수급조정위원회 격상 △수입산 닭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한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도입 등 육계에 관련 현안을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김제시에 소재한 한국메가양식중앙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오근호 회장, 한국수어양식협회 이기봉 회장, 한국송어양식협회 손희룡 회장, 한



국메가양식중앙연합회 송병운 회장, 한국양어협회 이항희 회장, 민물장어 생산자협회 신영래 회장, 전북내수면양식연합회 김철호 회장 등이 참석해 △해수부 내에 내수면양업과 신설 △양식장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 지원 대책 △내수면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예산 지원 △송어양식장 순환여과 시스템 국비지원 △메기, 자라 등 적체 물량 해소방안 △양식장 전용 및 사용허가 규제 완화 등 내수면 양식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의정활동과 농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관련 단체 및 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하며, 농어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중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윤영숙 도의원,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조례 발의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신산3)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4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윤영숙 의원을 비롯해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서영수 교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오선하 과장, 전주양천고등학교 이원형 교장, 비엔과컬처 양세벽 대표 등 15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배터리 내장 전자기기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여성·성평등 정책 추진, 선거 승리 행보 본격

민주 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튼 5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하며 향후 여성·성평등 정책 추진과 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윤영숙 도당여성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성남중앙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임실순창남원장수), 박민규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관악갑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등 주요 당직자와 여성위원회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에 출범하는 여성위원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여성위원회의 단합과 헌신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란수와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자라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튼 5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하며 향후 여성·성평등 정책 추진과 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향고 절차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계여성인날 기념 퍼포먼스에서는 “여성은 강하다! 여성이 해낸다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여성당원 화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북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는 이를 통해 “지역 여성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선거에서 승리를 견인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행사 마지막에 박민규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이 핵심 당원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탄핵 이후 민주당과 당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민주당의 회복 과정에서 당과 당원이 맡아야 할 책임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주의·헌법 수호 위한 노인 당원 결속의 장

민주 도당 노인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노인위원회가 지난 9일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2층 강당에서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노인 복지정책 추진과 세대 간 화합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 안정을 위한 노인 당원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전영배 전북특별자치도당 노인위원장, 최라도 전국노인위원장, 김광수 전국노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정부직 당직자와 내외 귀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내란수와 윤석열 석방 관련 국회 비상대기로 인해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내란수와 윤석열 석방 결정에



지난 9일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2층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노인위원회 출범식.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정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석방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전혀 무관하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당 노인위원회가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노인 당원들의 단결된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내란수와 윤석열 파면하라! 내란세력 심판하고 정권 교체 이뤄내자!’라는 구호와 함께 피켓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도당 노인위원회는 노년층 당원의 단합과 결의를 바탕으로, 미래 정치 혁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정읍·고창의 봄 앞당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당 지역위 당원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안김산위원회)이 지난 9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 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간 결속을 강화하며, 급변하는 정국에 적극 대응하는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소속 정읍시의회 의원, 고창군의회 의원, 당직자와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결정 촉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행사는 윤준병 지역위원장의 시국진단 연설을 시작으로, 영영선·김성수 도의원의 시국발언, 김용훈 특별위원장과 김미숙 국정의 결의문 낭독, 피켓 퍼포먼스,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 이후 윤 의원과 참석자들은 거리로 나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윤석열 파면 촉구’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가두행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탄핵의 당위성을 알렸으며, 시민들의 많은 성원 속에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고창=김영식 기자